

## 중국의 이념적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연구

조봉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의 생산력발전론에 따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급속한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이 봉착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념적인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사회의 이념적인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안고 있는 모든 위기들의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통합적 이념의 실종과 배금주의의 전면적인 확산, 다원화 된 사회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이념의 제시 등을 중심으로 이념적인 위기의 원인을 고찰해 보고 개혁개방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시기별로 내 놓은 이념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이념적인 위기에 대해 중국공산당 정부는 그들의 이념을 새롭게 포장하여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이념의 일방적인 제시만 가지고는 중국의 이념적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사회구조가 다원화 된 만큼 구성원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중국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 스스로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개혁개방, 이념적 위기, 중국공산당

### 1. 서론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제 3차 중앙전체회의(이하 11기 3중대회)를 기점으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이 출발한지 이미 3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무슨 빈곤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하는가?(鄧小平文選, 1993: 223)”라는 덩샤오핑의 선언처럼 그 이후 중국은 그가 강조했던 ‘생산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에 매진해 왔고, 물질적 생산력이 있어서는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주지하듯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심각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위기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 되는 것은 역시 빈부격차 문제 일 것이다.<sup>1)</sup> 개혁·개방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한 빈부격차는 비단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이어

져 도시와 농촌,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격차가 이미 심각하게 벌어졌고 이는 서쪽의 서장(西藏, 티베트) 자치구나 신강(新疆) 위구르족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과 유혈진압처럼 민족 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실업문제라든가,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발생한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할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예상했던 문제가 아니었다. 아울러 거품경제의 생성과 인플레이션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환 반복되는 위험요소들도 아직까지는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금융체제와 더불어 중국 경제를 한꺼번에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로 꼽힌다.

사회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의 통합적 이념이 실종되면서 기존의 사회 공동체의 가치체제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배금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 감각은 관료나 민간경영인에 의한 각종 부패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2008년 멜라민 분유사건은 기업윤리가 얼마나 실종 되었는지 그리고 기업 활동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관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런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른바 ‘짜퉁산업’이 중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할 만큼 양산되었고, 도박이나 매춘, 마약밀매 등 사회주의 초기에 근절되다시피 했던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다방면 걸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외개방정책 이후 특히 WTO에 가입한 이후의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프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중국산 생산품의 수입부진으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 반대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도 그나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점 등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경제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교역 대상국이 되었고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연평균 19%의 빠른 성장을 보여 2012년의 경우 2,151억 달러로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무려 20.2%에 달한다. 2013년 9월에는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었고 11월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나 인적교류 또한 크게 늘었다. 한중간의 경제 교류의 성격은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에 물려주는 형태의 수직분업체제에서 경쟁과 상호보완이 병존하는 수평분업체제로 바뀌어서 상호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점도 중국의 위험 요인을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원인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산적되어 있는 위기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른바 연착륙의 가능성부터 최악의 경우 중국 사회의 붕괴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가 결코 경시 할 수 없는 문제다. 앞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위

1) 2012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지니계수가 위험수준인 0.4를 훨씬 넘어 0.474나 되었다.

기상황에 대해서 이미 중국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각각의 현상들에 대해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왔고 중국 정부와 학계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들어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위기와 관련한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서는 주로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문제, 중국공산당의 권력유지 문제, 민주화·법제화 문제를 주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학 분야에서는 제정문제와 금융문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이 봉착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념적인 위기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중국 사회의 이념적인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안고 있는 모든 위기들의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통합적 이념의 실종과 배금주의의 전면적인 확산, 다원화 된 사회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이념의 제시 등을 중심으로 이념적인 위기의 원인을 고찰해 보고 개혁·개방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시기별로 내놓은 이념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한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이래로 중국은 흔히 ‘노선(路線)’이라고 부르는 중장기적인 이념적 지향점을 설정하여 각종 이론을 제시해 왔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산해 온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 이념적인 이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정부가 현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 해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제 3차 중앙전체회의까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이 봉착한 위기에 대해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비록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했지만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부패와 법제강화라는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줬고, 의료보장, 식품안전, 교육 불평등 해소, 여행법 개정 등 인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 개혁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중국의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건설[社會主義和諧社會建設]’과 ‘과학적 발전관’ 이후로 아직까지 새롭게 제시된 이념적 지향점은 없지만 ‘생산력발전 위주’의 전략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II. 현대 중국의 이념적 위기의 원인

### 1. 통합적 이념의 실종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이전까지 중국은 장구한 역사 동안 언제나 사회와 민심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이념이 존재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형성된 된 대일통(大一統)사상 때문이다. 대일통사상의 뿌리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BC770년에 시작된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의 혼란기는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던 BC221년 까지 무려 55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유지된다. 이 시기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서주(西周, BC1046년-BC771년)시대에 형성된 봉건제도는 무너졌고 천자(天子)에 의해 책봉된 봉건영주들은 제각각 분열되어 정복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명가, 음양가 등 이른바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상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였는데, 이 사상들은 크게 도가사상을 대표로 하여 혼란스러운 세속에 초월하려는 출세간(出世間)적 사상과 유가, 묵가, 법가사상처럼 세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세간(世間)적 사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세간적 사상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방법도 제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사상적 통일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는 이른바 대일통의 경향을 매우 강력하게 띠고 있다.

정치적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뚜렷하게 기재된 것은 『맹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양(梁)나라의 왕이 맹자(孟子)에게 천하의 평정을 물었을 때 그는 “하나로 평정되어야 합니다(『孟子』, 「梁惠王上」).”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천하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이다. 묵자(墨子)는 비록 유가사상과는 반대의 노선이었지만 ‘같은 것을 숭상한다’는 의미를 가진 「상동(尙同)」 편 전체에 걸쳐 중앙에 의한 정치적인 통일과 사상적인 통일을 주장했고, 순자(荀子) 역시 「정명(正名)」 편에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제가(諸家)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사상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馮友蘭, 1989: 200-202). 순자의 제자였던 한비자(韓非子) 이사(李斯)는 법가사상을 집대성하여 진시황(秦始皇)을 통해 마침내 천하의 통일을 이룩하였고, 특히 이사는 진시황의 제상이 되어 정치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썼다.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는 바로 이사의 간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무제(漢武帝) 역시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상적 통일을 꾀하였고 유가를 관학(官學)으로 공포하였다. 이후 신해혁명에 의해 청(淸)나라가 무너질 때 까지 2천 여 년 동안 유가는 중국의 주류사상으로 이념적 대일통의 중심에 서 있었다.

춘추전국시대나 위진(魏晉)남북조시대(221년-589년) 등 중국이 분열되었던 시기는 언제나 커다란 혼란과 궁핍을 가져왔고 이러한 기억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천하를 통일하여 하나로 평정하는 것만이 천하대란(天下大亂)을 천하대치(天下大治)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대일통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었고, 이는 비단 정치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통일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오랜 동안 공식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유가 이외의 사상들이 종종 ‘사문난적(斯門亂賊)’으로 공격당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을 허용을 한다면 제각각 주장하는 바가 달라 민심을 어지럽혀 천하대란을 불러 올 소지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록 왕조가 몇 차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유가 중심의 통일적 이념으로 유지되던 중국 사회가 견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에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때부터이다.

서양과 일본에 의한 군사적인 패배에 이은 굴욕적인 조약체결로 인해 중국인들은 그들의 전통적 이념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고 물밑 듯이 들어온 서양의 학문과 사상은 전례 없는 위기로부터 중국을 구해내고자 했던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다. 특히 정치이념으로서의 지향점이 뚜렷했던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쑨룽치(孫隆基)의 말대로 2천여 년 동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 온 유가는 바로 ‘민심을 통일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학문이었다. 중국에서 유가 사상의 파산과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의 유입 이래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은 재빨리 유학과 같은 기능을 지닌 사회공동체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孫隆基, 1997: 29).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중국공산당이 대륙 전체를 석권하고 나서부터는 의심할 여지없이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회공동체의 통합 이념이었고, 1956년 ‘반우파 투쟁’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까지의 극좌사조가 휩쓸던 기간 동안에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벗어나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문난적이 되는 것이었고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유가사상이건 마르크스주의건 중국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통합적 이념이 약화된 것은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덩샤오핑이 ‘생산력위주론(生產力爲主論)’을 내세우며 개혁·개방이 추진한 이후였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더불어 덩샤오핑은 ‘사상해방, 실사구시, 자기의 길을 걷는다(解放思想, 實事求是, 走自己的路)’라는 세 가지 방침을 제시하고 마오쩌둥시대의 ‘계급투쟁위주’에서 벗어나 ‘날로 증대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생산력간의 모순’을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이다.”, “성이 사씨(社氏, 사회주의)이나 자씨(資氏)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덩샤오핑의 생각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시장과 자본주의적 경쟁요소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당화 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사상 권위를 약화시켰고 사회를 강력하게 이끌어 오던 통합적 이념 즉 대일통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2. 배금주의(拜金主義)의 확산

이렇게 사라져버린 사회통합적 이념의 빈자리는 즉시 배금주의(拜金主義)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상해방을 통해 강고했던 사회주의 이념이 희석되었지만 이는 다원화된 가치의 추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금주의가 팽배해 진 원인으로는 우선 물질적 빈곤이 너무나 오랫동안 축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생산력으로 인해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가 지나치게 충족되지 못했다.

수치로만 보자면 건국초기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1953년-1957년)에서의 생산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 156개의 대형 개발프로젝트 추진했던 결과였고 스탈린방

식 그대로 중공업에 집중 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이 희생되었는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민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시기에 국내총생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해도 인민들의 물질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초과달성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마오쩌둥은 중소 관계가 악화되어 소련의 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약진 운동(1958년-1960년)을 일으켰고 대규모 군중 동원을 통한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중공업을 발전 시키고자 했다. 또한 농촌지역을 ‘인민공사’라는 이름으로 집단화하여 결국 2천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는 대계앙을 맞게 되었다. 턱없이 낮은 전문지식과 무분별한 농업 집단화로 인해 1957년에서 1961년 사이 농업생산량은 무려 24.6% 감소하였다. 이후 마오쩌둥이 명목상 국가 주석직에서 물러나고 류사오치(劉少奇)가 덩샤오핑 등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여 이른바 수정기를 거치면서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14.7%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해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체를 맞게 된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와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이웃나라들이 가파르게 경제성장을 지속하던 10년 동안 중국은 정치투쟁의 혼란기와 더불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9년 타이완의 1인당 GNP는 인민공화국의 6배 가량이었고 1952년에서 1979년 사이에 무려 416%나 증가했다(스펜스, 1996: 262). 그러나 중국은 이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한 것이 없었고 특히 인민들의 물질적 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억눌려 있던 수요가 개혁·개방 이후 물신숭배(物神崇拜)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배금주의가 팽배해진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다. 정치·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한 인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긴 원인이 될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경험했던 정치풍파와 권력의 부침을 목도한 경험이 인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는데, 1972년의 린바오(林彪)사건과 1976년 사인방(四人幫)의 몰락이 바로 그것이다. 1969년에 이미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 권력이 승계가 의심할 여지없이 보였던 중국공산당 부주석 린바오가 마오쩌둥을 암살하려 했고 암살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공군기로 도주하려다 몽골국경에서 추락사했다는 발표를 접한 인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그동안 문화대혁명을 전면에 지휘하던 막강한 권력 그룹이었던 사인방이 긴급체포 되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린바오와 사인방에 의해 유포되고 강요당했던 모든 정치적인 이념들이 부정당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확실한 것은 없었고, 이 불안한 시기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有錢能使鬼推磨).”는 오래된 중국속담처럼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 밖에 없어 보였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다가온 큰 변화도 중국 대다수 인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이다. 비록 수차례 실패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완고한 사회주의 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경제체제에서 대부분의 인민들은 별다른 소득격차 없이 절대적 평등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국가에서 마련해 준 직업을 버리고 자영업을 선택한 이른바 개체호(個體戶)를 필두로 하여 점점 소득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상대적인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국가가 계획경제의 시대처럼 능력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개인들 간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배금주의로 몰아갔던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진 신조어 중 ‘홍안병(紅眼病)’<sup>2)</sup>은 단순히 이 시기의 인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질투심만으로 생겨난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이념적 다원화의 제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적인 이념이 사라지고 배금주의가 확산한 것이 현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러한 현대 중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이념적인 위기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주의적 평등이라는 가치체계가 무너지자마자 그 자리에 금전에 대한 추구 즉 시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물신숭배나 배금주의 현상이 개혁·개방 후의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대 다른 사회에서도 늘 일정하게 그러한 경향이 존재해 왔다.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한 경쟁이 경제의 바탕이 되는 자본주의사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그렇지만 인간이 추구할만한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오직 금전만이 이처럼 기형적일 정도로 하나의 국가나 사회를 지배한 적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돈 이외에는 추구할만한 가치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점이다.

시장경제의 확대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다원화되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결코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할만한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다. 비록 ‘사상해방’을 외치긴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이념이나 가치가 중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했기 때문이다. 흔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삼권분립이나 다당제, 언론의 자유나 보통선거의 확대와 같이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을 위협할 요소가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유나 인권, 평등, 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까지도 ‘서방자유주의’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에 일률적으로 묶여 버렸던 것이다. ‘민주화’와 ‘법제화’라는 정치개혁의 목표가 뚜렷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화’라는 것 역시 민중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틀 안에서 주어지는 민주화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은 인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의지를 여지없이 짓밟았다. 이러한 통제된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들에 의한 다원화된 가치의 추구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덩샤오핑은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고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

2) 원래는 결막염을 뜻하는 말이지만 개혁·개방 이후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면서 돈을 번 이웃에 대한 질투로 눈이 빨개진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못을 박았지만, 현대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는 이미 부분적이거나 보완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인민들에게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시장경제는 직접적인 경제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다. 이러한 경제행위의 주체들은 생산과 소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보편화 된 지금 모든 경제행위의 주체들은 계급구성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동일한 계급 내에서도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의 다원화는 당연히 복잡한 사회적 이익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다원화된 사회는 각각의 이익집단에 부합하는 이념적 지향점과 가치체계가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해를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제한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본 장의 1절에서 밝혔듯이 중국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대일통을 유지해 왔던 일률적인 사회에서는 정치 혹은 이념상의 다원화는 절제가 없는 ‘어지러움(亂)’의 대명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 헌법 총강의 제1조를 보면 “중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동동맹에 바탕을 둔 인민민주 독재 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기 되어있다. 바꾸어 말하면 집권 정당인 중국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사회주의적 이상을 구현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계급내부의 편차가 거의 없었던 과거 마오쩌둥 시대에는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언급한대로 동일한 계급내부에서 광범위한 편차가 존재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비록 스스로의 계급이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나 농민의 이익이라는 것이 다종다양하고 편차가 커서 이러한 가치들은 매우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III. 시기별 중국정부의 이념적 대응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한 이후로 중국공산당은 매 시기마다 그 시기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민들에게 각인시켜 왔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은 ‘계속혁명론(不斷革命論)’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공산주의라는 이상사회에 도달할 때 까지는 끊임없이 계급투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계속혁명론은 반우파투쟁으로부터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까지 20년 동안 중국을 계급투쟁에만 매진시켰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후 중국의 사회주의 이론은 ‘생산력발전위주론(生產力發展爲主論)’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시기 중국에서 모든 가치의 기준은 그것이 생산력발전에 유리한지 아닌지가 되었다. 장쩌민 역시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개혁·개방이 심화된 1990년대 후반 바뀐 환경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새롭게 강조하기도 했다. 그 후 지난 10년 동안 중국공산당 16대와 17대를 이끌어 왔던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4세대 통치그룹의 이념은 ‘과학적발전관(科學發展觀)’과 ‘사회주의화해

사회론(社會主義和諧社會論)’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렇듯 시기별로 새롭게 구성된 사회주의 이념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이념적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본원칙 견지와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11기 3중전회 이후 앞서 언급했던 ‘사상해방·실사구시’의 구호 아래, 사람들은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던 극좌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중국 공산당 내의 상당수 사람들은 좌경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은 3중전회의 결정에 대해 회의하였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반대편에서는 사상해방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사상 혹은 사회주의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하였고 서방의 민주제도를 숭상하기도 하였다(廖蓋隆, 1993: 389). 이러한 현상은 11기 3중전회 직후에 나타난 것이었고 개혁·개방 정책 이후 최초의 이념적 위기였다. 1979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은 이러한 이념적 위기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3월 31일 덩샤오핑은 「4항의 기본원칙을 견지하자(堅持四項基本原則)」라는 제목의 중요한 담화를 하게 된다. 이는 개혁·개방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으로 견지해야할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 사상해방이 용납할 수 있는 경계를 분명하게 선 그은 것이었다. 4항이라는 것은 첫째,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 것, 둘째,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는 것, 셋째,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 넷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이 결코 자본주의사회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념적 안정을 토대로 부터 개혁·개방의 동력을 얻으려는 수사적인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원론에만 대입해 보더라도 허부구조 즉, 경제기초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상부구조만 여전히 뚜렷한 변화 없이 견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로 인해 4항 기본원칙과 같은 해에 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이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이라는 것이 처음 사용된 때는 1979년 9월 건국 3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예제잉(葉劍英)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의 연설에서였다. 연설문에서 그는 사회주의 물질문명의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이자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이후 덩샤오핑과 후야오방(胡耀邦)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던 것이 1986년 제 12기 6중전회에 보고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로 체계화되었다. 이후로도 리펑(李鵬)이나 장쩌민에 의해 계속해서 재천명되었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렇듯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신문명 건설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경제기초와 상부구조간의 탈절현상을 보여준다. 경제기초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모순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부구조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원리와 이념들이 강조되고 있다(양순창, 2002: 92).

개혁·개방 초기에는 워낙 완고했던 사회주의 이념의 속박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이념의 위기가 아니라 피상적이면서도 잠재된 이념의 위기를 단지 예상만 했을 뿐이었고, 이러한 수사적이고 선언적인 정부의 이념적 대응이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했던 이념적 위기와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개혁·개방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가파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대혁명 이전 주류를 이루었던 극좌사상들은 이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80년대 말이 되면서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과 개혁·개방 초창기에 나타났던 공산당의 부패와 비효율성 등의 내부적 요인이 융합되어 이른바 서구식 민주주의에 근접하는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 2. 삼개대표론

1989년 6·4 천안문사건은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렸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대중에 의한 새로운 이념적인 모색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혐의를 받아 위축되었다. 90년대에 들어 여전히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은 끊임없이 선전되었지만, 계획경제의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시장경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지향점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웠다.

한편으로 6·4 천안문사건을 경험한 후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이념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인민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서방의 부르주아 자유주의가 심각한 정신오염을 일으켜서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국가와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사회통합적인 이념적 지향점을 만들어 내야했던 것이다.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의 목표가 보다 구체화 되어 제시되었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체제의 확장과 더불어 다원화된 사회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되던 사회에 비해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약화시켰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국가권력을 구심점으로 한 새로운 돌파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이 등장하게 된다.

2000년 2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은 새로운 시기의 중국공산당의 역할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시종 중국 선진 사회생산력의 발전요구와 중국 선진문화의 전진방향과 중국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충실히 대표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이것은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란 말로 정형화되어 대대적으로 선전 학습되었고, 2002년 중국공산당 16대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그리고 등소평 이론과 더불어 당을 이끄는 중요한 지도사상”의 지위를 얻게 된다.

삼개대표론의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선진 사회생산력은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생산력 발전론과 유사하고 선진문화라는 것 역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과 관련 있

어 보이며 인민의 근본 이익 역시 마오쩌둥 이후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인민이 아니라 ‘광대한 인민’에는 노동자와 농민뿐 아니라 사영기업가도 포함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의 주요 세력이 된 사영기업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자본가계급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이익까지 중국공산당이 대 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2002년 가을에 열린 중국공산당 16대에서는 삼개대표론에 근거해서 생산력 발전과 사회 진보에 공헌한 자영업자나 사영기업가(자본가)의 입당도 공식 허용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1989년 ‘당 건설 강화에 대한 통지’를 통해 사영 기업가의 입당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입당의 문호는 대폭 확대되었고 중국공산당의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爲人民服務)’와 같은 가치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영기업가들은 당원이 돼 한편으로는 신분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며 한편으로는 마음껏 돈을 벌자는 풍조가 팽배해졌다. 다시 말해 중국공산당은 사영기업가들에게 당원의 신분을 허락하여 중국이 봉착한 위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고 부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 3.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당 총서기(2002년 11월), 국가주석(2003년 3월)에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2004년 9월)직을 차례로 물려주게 되는데 과학적 발전관은 후진타오가 당 총서기로 선출된 2002년 11월의 중국공산당 16대에서 핵심 국정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이 이념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정책 추진을 중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과 인간을 본위로 하는 발전(以人爲本) 그리고 균형있는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내 학습 열풍을 일으켰고 관영 언론 매체들은 17대를 앞두고 과학적 발전관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과학 발전관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해 온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여전히 성장을 중시하되, 불균형 발전 전략인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으로 초래된 빈부격차,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200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17대에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이론, 장쩌민의 삼개대표론과 함께 지도이념으로 당장(黨章)에 삽입되었다.

17대 이후에는 ‘조화사회 건설(社會主義和諧社會建設)’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외연을 넓히게 되는데 이는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중국공산당이 제기했던 여러 정책과 개념, 즉 ‘과학적 발전관’과 ‘균형발전’, ‘공동부유’, ‘조화사회’와 ‘조화세계’ 등을 집대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은 기준에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내용이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이것이 후진타오의 통치이념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조화사회 건설은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16기 4중전회에서 최초로 제기되었고, 이후 공산당 중앙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2005년 초부터는 일부 지방에서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시작되었다.

물론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때부터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켜 착취

를 없애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최종적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이르는 것”(鄧小平文選 제3권, 1993: 373)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장쩌민 시기까지 중국은 생산력 해방과 발전에만 치우쳐 있었고 양극화 해소나 공동부유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조화사회 건설은 민주와 법치, 공평과 정의, 신뢰와 우애(誠信友愛), 충만한 활력(充滿活力), 안정과 질서(安定有序),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제시한다. 후진타오는 조화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원칙(以人爲本), 과학적 발전관, 개혁 개방, 민주법치, 개혁·발전·안정의 정확한 처리,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 공동건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가지 즉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원칙과 과학적 발전관은 후진타오가 주장한 것이다.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된 목표와 주요임무로 9개 항목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첫째가 사회주의 법제 건설과 법치(依法治國)를 통한 인민의 권익 보장, 둘째가 지역격차 해소, 수입분배구조 개선, 그리고 가정소득증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셋째가 취업확대와 사회보장체계 확립이다. 그밖에도 서비스형 정부 건설, 국민의 사상도덕과 문화소질 제고, 전사회 활력증진과 혁신형 국가 건설, 사회관리체계 개선과 사회질서 향상, 효율적 자원 활용과 생태환경 개선 등을 제시한다.

조화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가시적인 조치는 반부패활동이라 할 수 있다. 16기 6중전회가 개최되던 2006년 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은 톈진(天津)시, 후난(湖南)성, 안후이(安徽)성, 푸젠(福建)성 등에서 부패와 연루된 고위급 당정간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추진했다.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반(反)조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당정간부의 부패이고, 그래서 부패척결은 조화사회 건설의 중요과제라는 것이다. 먼저, 당정간부의 부패는 정치적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이윤(지대)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한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막아야 한다. 또한 당정간부의 부패는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저하시키고 통치 정당성에도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강력한 반부패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들어와서 최근까지 중국 정부의 이념적 위기에 대응은 조화사회 건설까지 진행되었다.

### IV. 결론

이념이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존립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식적 기반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정치과정을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정치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의 당면과제는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여 사회주의 이상을 구현한다는 당의 전통적 이념과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김도희, 2008: 114-115). 성(姓)이 사씨(社氏, 사회주의)인지 자씨(資氏, 자본주의)인지를 묻기전에 “판단의 표준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지, 사회주의국가의 종합국력 증강에 유리한지, 인민들의 생활수준 제고에

유리한지를 주요하게 보아야한다.”(鄧小平文選 제3권, 1993: 372)는 덩샤오핑의 말처럼 이후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논쟁을 피해 왔다. 삼개대표론이나 조화사회론에서도 체제의 이념적 성격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

물론 조화사회 건설에서 제시하는 여러 정책들 즉 법치, 균형발전, 성장과 분배의 동시 고려, 민생 현안 우선해결, 성장방식 전환, 혁신형 정부건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대일통적인 이념적 방향제시가 될 수 있을까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것이 현재의 중국 정치구조에서는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다 것도 문제가 된다. 균형발전과 분배, 민생현안 해결을 강조하는 조화사회 건설은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해왔던 경제 성장 일변도 정책과는 다른 것이지만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원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농촌문제나 교육·의료·주택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런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앙의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부 연해지역의 지방정부도 성장이 아닌 분배정책에 자원을 투자할 경우 성장률 저하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화사회 건설은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과제이고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정책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 확대나 교육·의료문제 해결과 같은 조화사회 건설 정책은 지방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지방 당정간부들이 조화사회 건설에 적극 나설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화사회 건설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정치 체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인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통선거가 확대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이 되어야 하며, 언론이 당정과 사회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공산당의 통치 권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권력이 인민들의 이미 잠재된 불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조화사회 건설이 제시된 중국공산당 16대에서 아울러 강조되었던 것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였다. 매마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껏 자긍심이 고조되었던 중국인들에게 ‘애국주의’는 어느 정도 사회통합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티벳유흔진압에 항의하여 성화 봉송을 막아 올림픽을 보이콧하려 했던 세계 인권단체들을 향해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인 시위자들이 보여주었던 극렬함을 상기한다면 이는 ‘신중화주의’ 혹은 ‘중화패권주의’라는 경계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후진타오의 집권 2기 무렵에는 민간으로부터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장점을 복원하여 이념적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화위귀(和爲貴)로 상징되는 사회의 조화를 중시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유가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 일종의 사회통합의 대안적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것은 중국공산당 주도하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 해석하듯이 전통

문화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복원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중국공산당이 21세기 들어 갑자기 자신들의 전통문화의 복원 움직임에 대해 관조 혹은 방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애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어 사회를 통합시켜 보려는 대내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연성권력(軟性權力, Soft Power) 확대를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대외적인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것이 공자(孔子)를 상징으로 하는 전통문화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장쩌민 시기부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캠페인을 벌이며 유가적인 덕목인 충효인례(忠孝仁禮)가 강조되었던 것이나, 2006년 후진타오정부에서 ‘사회주의 8대 영욕관(榮辱觀)’<sup>3)</sup>을 대대적으로 교육 선전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주체로 나서 전통문화의 장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사회주의 8대 영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질서와 예절, 업무에 대한 성실과 신의, 인민에 대한 봉사과 사회 기여 등 전통적인 도덕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이념적인 위기에 대해 중국공산당 정부는 그들의 이념을 새롭게 포장하여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중국 정부도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이념의 제시만 가지고는 중국의 이념적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사회구조가 다원화 된 만큼 구성원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중국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 스스로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선언적인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김병채 외 공저. 2008.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도희 외 공저. 2008. 사회과학도를 위한 중국학 강의. 경기: 인간사랑.

3) 樹立社會主義榮辱觀: 以熱愛祖國爲榮、以危害祖國爲耻。 以服務人民爲榮、以背離人民爲耻。以崇尚科學爲榮、以愚昧無知爲耻。以辛勤勞動爲榮、以好逸惡勞爲耻。以團結互助爲榮、以損人利己爲耻。以誠實守信爲榮、以見利忘義爲耻。以遵紀守法爲榮、以違法亂紀爲耻。以艱苦奮鬥爲榮、以驕奢淫逸爲耻。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영광이며 조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치욕이다. 인민에 봉사하는 것은 영광이며 인민을 배신하는 것은 치욕이다. 과학을 숭상하는 것은 영광이며 우매하고 무지한 것은 치욕이다. 근면하게 노동하는 것은 영광이며 안일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치욕이다. 단결하여 서로 돕는 것은 영광이며 남에게 해를 끼치며 이기적인 것은 치욕이다.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영광이며 利 때문에 義를 잊어버리는 것은 치욕이다. 기율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영광이며 법을 위반하는 것은 치욕이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분투하는 것은 영광이고 교만하고 나태한 것은 치욕이다.

孫隆基, 박병석 역. 1997.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경기: 교문사.  
 로드릭 맥과커, 김재관, 정해용 역. 2012. 중국 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서울: 푸른길.  
 廖蓋隆, 정석태 역. 1993. 중국공산당사 1919-1991. 서울: 녹두.  
 사토 마사루, 이혁재 역. 2012. 시진핑 시대의 중국. 서울: 청림출판.  
 孫隆基, 박병석 역. 1997.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경기도: 교문사.  
 안치영. 2013.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경기: 창비.  
 양순창. 2002. 중국 개혁개방이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경과와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0(1): 91-112.  
 이정남 외 공저. 2012. 민주주의와 중국.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출판부.  
 전성홍. 2010.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에머리치 홀딩스.  
 조너선 D.스펜스, 김희교 역. 1998. 현대중국을 찾아서 2. 서울: 이산.  
 풍우란, 정인재역. 1989. 중국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第3卷. 人民出版社.  
 江澤民. 2006. 江澤明文選 第3卷. 人民出版社.  
 葉劍英. 1996. 葉劍英選集. 人民出版社.  
 青蓮斌. 2008. 十七大精神深度解讀: 社會建設篇. 人民出版社.  
 張曉東, 顧玉平. 2008. 社會和諧論: 當代中國新社會治理理念的理性省思. 江蘇人民出版社.  
 鄭慧. 主編. 2008. 和諧社會與社會主義政治建設. 人民出版社.

**趙奉來:** 중국 北京大學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공동 저서로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년)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철학논집 제27집(2009년), 「당대 중국의 '화해사회론'의 철학적 함의와 그 전망 중국 근현대사상」 중국학논총 31호(2010년), 「현대 중화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본질: 孫文과 毛澤東의 민족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국제중국학연구 제64집(2011년)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중국의 근현대사상 및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연구 등이다(maozd@incheon.ac.kr).

A Study on the Ideological Crisis in China & Response Devices of Chinese Government

Bong Lae Cho

During the past 35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on a Dengxiaoping theory economic growth in China has actually increased. But, through a rapid change in policy, diverse new crisis factor has arise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deological crisis in China and response devices of Chinese government. In a sense, the ideological crisis is the most inclusive & basic crisis. To carry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 considered the cause of ideological crisis around disappearance of integrated ideology, mammonism and fetishism, and state ideology which has indiscriminately suggested by Chinese government. Chinse government suggested ideological counterplan but it was less effective in problem solution. So Chinese government must look dispassionately at the realities that the suggestion of state ideology can't be a clue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and they need drastic reforms.

**Key words:** reform and opening up, ideological crisis, chinese communist party

투 고 일: 2013년 12월 07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1일